

박근혜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의 농어촌 공약

출처 : 박근혜의 국민행복캠프
(www.park2013.com)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소득과 복지가 함께 가는 농정을 펼쳐서 우리 농촌과 농업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3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아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나라,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직불금 인상과 확대 그리고 농자재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더욱 강화해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재해보상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첨단 IT를 활용하여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면이 바다인 지리적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산자원의 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수산의 기틀을 마련하겠

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산림녹화를 활용하여 임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제고, 국민들의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녹색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1.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진단

- 현행 복지제도는 개인·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지 지원 필요

약속

-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상' 제도 도입
-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 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영세 고령농 일손 돕기

-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
-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

실천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이상 지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79만원)을 상향 조정,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2.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진단

-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36.2%, 군 지역 병·의원 분포비율 11%,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농어촌 거주자의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여건이 도시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
- 농어촌 관련 여건개선 관련 기관이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분산되어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와 같은 비효율 발생

약속

-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
-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농어촌 통합 교육 활성화
-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실천

-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3.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진단

- 2008년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짐
- 특히 여름철 고온,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확 감소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약속

-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
-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
- 수산자원 개발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실천

- 해외 농업 적극 지원방안 수립 추진

4.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진단

-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단순생산에서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성장동력화 필요
- 이를 위한 IT·BT 연계 활용, 농어업 관련 R&D 투자 확대, 종자·생명산업 육성, 농어업과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연계 노력 미흡

» 축산수첩

- 친환경적인 자재 생산·활용과 재배방식 적용 요구

약속

-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 농림수산물식품 예산의 10% 이상을 R&D에 투자
- 농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완성하기 위한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 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을 육성
- 친환경 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도시농업 육성
- 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 적극 지원

실천

- 농어업 지원 R&D예산 확충 및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5.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진단

- 현행 고령 농어업 인력의 저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력 정책 요구
- 농어촌 고령화, 농어가 인구감소 등에 따라 현장의 농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

약속

- 농림수산업 인력 은행(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 포함) 설립
- 인턴제도를 비롯해 창업농, 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마을경영체' 등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실천

-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률 제정
-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변경

6.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진단

- 2011년 농어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9.1%로 1995년 95.1%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앞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식량안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쌀 생산기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쌀 농가의 소득보전 필요

약속

-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및 내실화
- 발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발작물에도 적용

실천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7.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진단

-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농약, 사료, 에너지 등의 가격이 동반 상승
- 농업생산 투입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경영부담

가중

등에서 많은 규제가 존재

약속

약속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
-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영, 영세농을 대신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 외식 산업에의 참여 확대
-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 유도

실천

실천

-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칭)'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품목위원회 설립: 품목별 정책 수립, 집행
- 「식품위생법」 등 개정

8.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9.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진단

진단

-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가공·외식·관광 등 2차, 3차 산업으로 외연확대정책 필요
- 농어촌의 전통주, 발효식품 등은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나, 농가의 판매용 전통식품 제조, 전통주 판매수량 제한

- 최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3차례 연속해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등 농어업 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음.
- 피해복구가 공공시설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과 복구는 민간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에 따른 민원 지속 제기

약속

-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 ※ 현재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급여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고 대형 재해 발생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 축산수첩

실천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10. FTA 협상 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진단

-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농어민의 피해의 식 팽배
- 농어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 넓은 의견수렴 채널도 부족
- FTA 국내보완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농어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

약속

-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
-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실천

-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 식품 예산 지원
-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

11.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진단

- 축산분뇨,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 국민 경제 부담 증가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축산물 수입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시급
-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 경감 필요

약속

-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
-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 마련

실천

-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이용 효율화
-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 구축
-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설현대화 자금저리융자 지원 대폭 확대
-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